

'HACCP' 모든 식품 95%까지 확대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

■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식품안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되고,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식품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HACCP 인증대상 업체를 현재 411개소에서 4천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약, 향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현재 1천638개→2010년 1천882개)

대상 업체, 411개→4천여개로 늘어

내년 6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실천 의지·관리 등 실효성 확보 관건

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00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강화 조치로는 ▲우유농산물관리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10%로 확대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수의사 처방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항생제 사용통제 ▲소해면상뇌증(BSE) 검사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감시, 단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100명) 구성 ▲식품안전 기준설정, 현장지도·점검을 국민이 직접 참관하는 국민참관

인 확대(20명→100명) ▲학부모,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 명예감시단 4만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식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소비자단체가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 안전인증제',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된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실천 의지와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불량만두 파동이 일었던 2004년 6월과 '중국어 기생충알 김치' 논란이 일었던 2005년 12월에 두 차례 정부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식품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수십 가지 대책이 제대로 관리·감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 부분 역시 기업과 소비자들과의 마찰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 설

예산확보 비상 걸린 광주·전남 현안사업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 10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지역 정치권도 부처 장악력이 약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광양항 건설, 아시아문화전당 조성 등 주요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10~30% 하향 조정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여수엑스포 국고 지원 등 예산 증액 및 확대가 절실한 현안사업들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확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다. 정권교체로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위축되면서 각 부처의 호남 인맥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탓만 하며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현안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공조를 강화해 체계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라는 틀에서 벗어나 공동대응해야 함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달라진 정치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현안사업의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속도가 좌우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예산 확보를 위해 종전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대책 '빛 좋은 개살구' 안돼야

정부가 어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012년까지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과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 등에서 드러나듯 먹거리에서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생산식품의 30%에 불과한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대폭 확대되고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도 설립된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소비자가 식품의 감시 및 단속에 참여하는 길도 열렸다.

대책은 수준급 이상으로 보인다. 논란이 큰 식품 집단소송제를 제외하면 수입 쇠고기 유통통로 추적 강화 등 거의 모든 대책이 망라돼 있다. 제대로만

시행하면 우리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천 의지와 관리감독 능력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식품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품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국민들만 환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아무리 완벽해도 시행 의지가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 가 될 수밖에 없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다. 대책을 발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온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한 만큼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 등 대책을 보완하고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재선

강박원(72·광산1) 광주시의회이 제5대 광주시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다시 뽑혔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 17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18명 가운데 10표를 획득한 강박원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강 의원은 이날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10표를 얻어 7표를 확보하는데 그친 나중천(65·남구2) 의원을 눌렀다.

강 신임 의장은 관선 영암군수, 제 4대 광

주시의회 부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제 5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다.

제 1부 의장에는 조호권(48·북구 4)의원, 제 2부 의장은 진선기(44·북구 1)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광주시의회가 지난 1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방식을 이른바 '교황식'에서 '입후보 등록제'로 바꾼 뒤 처음 치러진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11일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를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너무 야비하다”

盧 전 대통령 “열람권 보장되면 사본 돌려줄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일 불법 기록유출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너무 야비하게 한다”며 “앞으로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 사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의 면담을 마친 뒤 기록유출 논란의 경위를 묻는 송영길 최고위원의 질문에 “너무 모른다. 사실과 거의 안맞는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록유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을 보지 말라는 말이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라며 “그년부터 (청와대측과) 대화하면서 (열람) 조치

를 바꿨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대로 사본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열람권을 보장해주면 된다. 사본을 돌려주면 열람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국기록원)에 와서 보라는 것”이라며 “전용선 서비스를 위해 월 250만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거나 내시 3명에게 공무원 비밀취급인가를 내주고 관리시켜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전용선 연결이 안돼 대통령이 사본 한 부를 갖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있느냐)”며 “열쇠 2~3개로 보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연결선이 차단돼 있는데 그 한부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불편하면 전용선 서비스를 해달라. 그러면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입 원자재 가격 지수

10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한국수입업협회가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종합해 산정하는 '코이마지수'가 10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6월 코이마지수는 453.55 포인트를 기록, 5월의 425.06 포인트보다 28.49 포인트가 급등했다. /연합뉴스

코이마 지수는 1995년 12월의 원자재 수입가격을 기준치 100으로 놓고 매월 30개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6월 원자재 수입가격은 유가 급등으로 유화원료와 광산품이 각각 11.2%와 7.8%로 가장 크게 올랐으며, 유·무기원료(2.77%)와 철강재(2.08%)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과가 증가한 비철금속과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한 섬유원료는 각각 2.02%와 0.56% 하락, 5월에 이어 동반 약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투자정책국장 송영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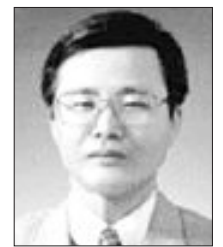
건설방재국장 홍석태세

전남도 실·국장급 인사

전남도는 11일 송영종 투자정책관을 투자정책관으로, 홍석태 복구지원과장을 건설방재관으로 각각 발령하는 등 2008년도 하반기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5일자로 실시되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바뀐 기획조정실장에는 고영길 기획관리실장, 농림식품국장에 고근석 농정국장을 각각 발령했다. 또 김연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발령했으며 강진원 기업도시기획단장은 해외연수대상자로, 윤진보 F1지원과장은 F1대회준비기획단장으로 전보발령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명예퇴직에 따라 최소한의 인사를 단행, 조직안정을 도모했으며 당면 주요현안은 전문성과 업무



〈송영종 국장〉

연속성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단체장 및 과장급 인사는 오는 22일께, 5급 이하 하위직은 이달 말까지 후속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영종(52·행시33회) 국장은 고충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교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담당관, 투자진흥과장, 보성부군수 등을 지냈다.

홍석태(58) 국장은 나주가 고향이며, 광주대 토목공학과와 서울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를 마쳤다. 장성군 건설과장, 나주시 건설교통과장, 복구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의회 개혁...주민 신뢰 회복하겠다”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에 재선출된 강박원(72·광산 1)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깊이 새겨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있어 시민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회 차원의 개혁 방안을 마련,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 및 의장 후보로 나선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주류·비주류로 구분하는 것이 의회



발전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유급보좌관제”와 “의정비 현실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반기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집행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항-중 타이창항 컨 항로 개설...오늘 첫 배 출항

국토해양부는 광양항과 중국 타이창항을 잇는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돼 12일 첫 배가 광양항에서 출항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수성 타이창항은 양쯔강 유역에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2005년 23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였던 물동량이 지난해에는 100만TEU로 크게 늘어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거점항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광양항과 타이창항은 울 1월 물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C&라인이 200TEU급 선박을 주 1회 투입하기로 하면서 항로가 개설됐다. /연합뉴스

“핵 신고서 검증 내달 11일 이전 착수”

6자회담 이틀째-北, 검증 지침 수용

“폐기물 저장소도 신고서에 포함”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의 시한인 8월11일 이전에 핵신고서 내용의 검증에 착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1990년대 1차 핵위기 당시 ‘진실 규명’의 핵심사실이었던 액체폐기물저장소 2곳을 신고서에 담아 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핵 검증활동이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1일 오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담을 속개, 전날에 이어 핵 신고서 내용의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문제를 협의했다.

핵심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90년대에는 신고서에도 명기하지 않고 은폐하려했던 액체 폐기물저장소를 신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과거 북한 핵활동의 진실을 규명하자면 이 사실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핵화 및 경제지원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6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문제 ▲비핵화 3단계 협상의 기본적인 구조와 방향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고유가 때문에... 어선 조업일수 11% 줄어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어업인들이 배를 띄워 생업에 나서는 날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출항 기록이 남아있는 수협 소속 어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6월 조업 어선 수는 2만9천28척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6% 감소했고, 조업일수도 31만6천711일에서 35만6천688일로

11.2%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어선 수 기준 업종별 조업 감소율은 ▲쌍끌이 대형선선지망 16.5% ▲대형선망 8.2% ▲근해 채취기 4.4% 등의 순이고, 조업 일수 감소폭 역시 기록을 많이 사용하는 이들 업종에서 각각 23.5%, 14.9%, 9.3%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서예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일만경 - 김중두

全圖이 한장막 됐다